

6·2 지방선거

배심원 전략 고심속 막판 지지 호소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전 당원 여론 조사가 7일부터 실시되면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사실상 시작했다. 시민공천배심원제도를 위한 현장 패널 및 사회자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각 후보 캠프는 시민배심원제도와 관련한 토론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여론조사 참여 독려와 함께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 배심원 선정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밤 각 후보 측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원 전수여론조사를 시작했다. 여론조사는 오는 9일까지 실시된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지난달 하순부터 당원으로 등록된 17만여 명을 상대로 실제 당원 여부를 확인해 상당수 '중이당원'을 걸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에는 각 후보 측이 '제비뽑기'로 뽑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5개가 참여하며, 결과는 오는 10일 후보 선출일인 시민배심원단 평가와 함께 공개된다.

여론조사 시작과 함께 사실상 경선에 돌입함에 따라 강운태, 이용섭, 정동채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당원과 광주시민에게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는 "이번 경선에 광주의 자존심과 광주발전의 사활이 걸렸다"며 "광주시장과 국회의원, 장관 등의 공직생활을 두루 거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둔 저를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어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돌입

당원 전수여론조사 시작

경선 패널·사회자 확정

"광주발전을 견인할 시장은 광주를 잘 알고, 광주를 일으켜 세울만한, 광주의 정체성이 있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 후보는 "광주는 경제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중앙부처에서 30년 이상 경제정책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를 선택하면 광주발전을 10년을 앞당길 수 있고, 시민·당원들과 함께 위대한 광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국가 부도사태를 극복한 리더십을 배운 저력으로 광주경제의 위기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창조적 문화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저력이 있다"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세 후보는 이날 저녁 광주 MBC 주최로 열리는 합동토론회에 참석하고 나서 오는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시민배심원제와 관련한 토론회 준비에 전념할 계획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세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에서 접전을 벌이고 시민배심원단의 '표심'을 쉽게 예측할 수 없어 말 그대로 투쟁을 열어보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려온 강 후보 측은 대선문이 힘을 받고 있고, 배심원제의 공정성만 담보된다면 행정능력과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많은 만큼 승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강 후보와 지지도 차이가 좁혀지고 있고, 배심원제에서 자질과 능력, 비전이 평가를 받으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오는 10일 오후 1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사회자는 손혜재 한국NGO학회 회장이 맡고 오수열 조선대 교수와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겸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 배옥병 (사)학교 급식 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최병두 현 대구대학교 사법대학 지리교육과 교수(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비주류인 '쇄신 모임'의 천정배, 김영진, 이석현 의원 등이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등 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심원제 지역민심 반영 못한다”

‘민주 쇄신모임’ 의원 20여명 공천방식 반발

민주당 '수요모임(가칭)' 의원들이 '민주당 쇄신모임'으로 명칭을 정하고 시민공천배심원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격적인 당 지도부 견제에 나섰다.

쇄신모임 의원들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하고 6일 지방선거에 대한 당 지도부의 공천방식 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이 이런 상태로 가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장 의원이 읽은 발표문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야권연대는 필수불가결하다"며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야권연대는 '무늬만 연대', '지는 연대'로서 당 지도부의 사당화에 이용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당 은평구청장 후보선출 방식과 관련 "시민배심원 총 212명(전문배심원 106명·현직배심원 106명) 중 전문배심원 89명과 현직배심원 29명의 참여로만 경선이 실시돼, 결국, 전문배심원들의 의지에 따라 후보가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지역민심이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를 빚었다고 공격한 셈이다.

특히 이들은 경선 진행을 위한 여론조사기관 선정 및 시민공천배심원 선정이 모두 배일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은 "중앙에서 권력을 잡은 몇 사람이 장난칠 수 있다는 게 은평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문학진 의원은 "전문 배심원을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지방선거에 대한 당 지도부의 투명하지 못한 공천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전문배심원의 선정 과정을 밝히고 현직배심원의 낮은 참여율을 감안해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김영진·이석현·천정배 의원이 공동대표로 선출됐으며 장동영·추미애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이 모임에 참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특정후보에 유리한 불공정 경선룰”

10일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3명 중 두 후보의 후보 등록 유보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예비후보는 전남 불공정 경선 우려를 주장하며 7일 마감인 경선 후보등록을 유보했다.

중앙당은 이에 대해 공식적 언급 없이 관련자들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선 무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후보는 이날 긴급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 일정 연기를 요구하며 이날로 예정된 경선 후보 접수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히고 성명서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원내대표)에 직접 전달했다.

두 후보는 "기초단체장 경선 실시 이후 지사 경선 실시"라는 애초의 경선 일정대로 경선을 실시해 주기를 요청하고 전남지사 경선과 관련된 모든 일정과 방법이 확정될 때까지 후보 등록을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후보 등록 유보의사를 밝힌 뒤 서울로 올라 원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도지사 경선 선

전남지사 경선 파행

주승용·이석형 후보 반발

토론회·유세 등 일정 차질

거인단의 구성 비율과 규모,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고 특정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맞춤형 경선방식을 적용해 가고 있다는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중앙당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이 후보 측은 " 그동안 경선 방법이 결정되기까지 단 한 번도 후보들의 입장을 묻거나 협의도 없었다"며 "그러나 박준영 후보 측의 요구는 무작정 들어주는 중앙당의 행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원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후보 경력 사용 문제, 선거인단 규모, 도당대의원 선거권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도 후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경선룰을 정하고 있다"며 "특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경선룰을 만들면서 불공정 경선을 자초하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원 위원장은 이에 대해 "물 미팅은 이제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중앙당 선관위가 두 후보의 입장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경선 일정을 진행할 경우, 이때는 자동으로 박준영 후보 단독 출마가 돼 경선이 무산된다.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전남지사 경선이 무산된 상황에서 수도권 선거를 준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추가 등록기간을 두면서 후보자 간 경선룰 협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9일부터 예정된 TV토론회와 10일과 11일 후보 합동유세, 17일 경선 등의 일정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물 협의가 이뤄진다고 자동으로 도지사 후보 경선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후보 경력 사용 문제와 도당 대의원 선거권 부여 여부 등 아직도 후보자간 이견이 있는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앙당 특정후보 밀어주기?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여론조사 기관 명단 유출 의혹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 여론조사 기관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누군가 여론조사 기관 명단을 고의로 유출한 것이 맞다면, 중앙당이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는 소문이 현실화할 것으로 읽혀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강운태·이용섭 후보 측은 "지난 6일 중앙당에서 광주시장 3명의 후보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여론조사 기관 선정 등 세부 규칙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동채 후보 측 대리인

이 여론조사 업체 명단이 적힌 문건을 갖고 있는 발견해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 대리인이 소지한 문건에는 '민주당 지방선거 여론조사 경선 선정업체 LIST' 제목에 국민경선 여론조사업체 10곳 명단과 전 당원 여론조사업체 12곳 명단이 기재됐다.

이에 따라 강운태, 이용섭 후보 측은 중앙당이 작성한 문건이 유출된 의혹이 있는 만큼 여론조사기관을 매 출력 기준 상위 15위 업체 중 5곳을 추첨을 통해 뽑자고 요구해 중앙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강운태, 이용섭 후보 측은 "정동채 후보 측이 갖고 있던 전당원 여론조사 업체 리스트 12개 가운데 10개가 중앙당의 전당원 여론조사 업체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며 "목록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광주시장 예비 후보 대리인들과 함께 있었던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본부의 최재성 의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부 유출자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양형일 전 의원의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미리 확인해 보려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문건에 불과하다"며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KIIDA 한국광산업진흥회

설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10년 동안 한국광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온 한국광산업진흥회(이하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회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명품 만든 기업**

- 한국광산업진흥회 창립 10주년 기념 상품 제작
- 한국광산업진흥회 창립 10주년 기념 상품 제작
- 한국광산업진흥회 창립 10주년 기념 상품 제작
- 한국광산업진흥회 창립 10주년 기념 상품 제작
- 한국광산업진흥회 창립 10주년 기념 상품 제작
- 한국광산업진흥회 창립 10주년 기념 상품 제작
- 한국광산업진흥회 창립 10주년 기념 상품 제작

▶ **앞으로 펼쳐질 비전**

- 한국광산업진흥회 창립 10주년 기념 상품 제작
- 한국광산업진흥회 창립 10주년 기념 상품 제작
- 한국광산업진흥회 창립 10주년 기념 상품 제작
- 한국광산업진흥회 창립 10주년 기념 상품 제작
- 한국광산업진흥회 창립 10주년 기념 상품 제작
- 한국광산업진흥회 창립 10주년 기념 상품 제작
- 한국광산업진흥회 창립 10주년 기념 상품 제작

LG이노텍(주) 외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원사 일등